

북한의 대남 정책과 군

권민웅

북한문제조사연구소 소장

북

한의 대남 정책은 북한체제의 유지로부터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 정책에 이르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통일관과 통일 정책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통일관은 분단된 민족의 통합이나 국토의 결합이 아닌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

‘민족 해방’ 문제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자 통치’ 논리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적·계급적 모순에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의 방법과 관련하여 북한은 이른바 ‘평화적 전도(방법)’와 ‘비평화적 전도’의 2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정세’에 따라 선택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김일성 저작선집」, 1권).

여기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인민들의 압력으로 물러나고 북한과 단합하여 조국

통일 병침을 실행하는 가능성’과 ‘남조선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라고 못박고 있으며, ‘비평화적 방법’이란 바로 ‘미제와의 전쟁’이며 ‘남조선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고 남조선 인민들이 결정적 투쟁에 나서 북반부의 지원을 요구할 때 수행하는 정의의 해방 전쟁’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일성 저작선집」).

상기와 같이 북한은 ‘남조선 혁명’ 아니면 ‘전쟁’이라는 통일 노선에 입각하여 이른바 ‘3대 혁명역량’ 즉, ‘혁명의 기지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과 ‘남조선의 혁명 역량’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에 의한 국제적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객관적 정세’에 따라 대남 전략(정책)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을 통하여 무력 통일의 한계를 경험한 후 평화적 방법(남조선 혁명)을 강조하였으며, 4·19와 5·16의 정권 교체를 간접 경험하면서(남조선 혁명의 기회 상실로 간주) 보다 적극적인 비평화적 방법을 추진하였다. 울진·삼척 무장 간첩 침투 사건 등 지하당 구축과 게릴라 침투 사건이 실패하고 미

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으로 데탕트의 국제 질서가 도래하자, 북한은 평화적 방법을 채택하여 남한의 강력한 반공 의식을 와해시키고 자하당을 구축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이 시기에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 특징이다.

10·26과 5·17로 군부 주도의 정권이 들어서자 평화적·비평화적 방법을 병행 모색하였으며, 90년대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여 이른바 ‘국제적 혁명 역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북한은 전례없이 평화적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1년 남북간에 기본합의서가 이루어진 것이 산물이라고 하겠다.

이로부터 최근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은 그들의 대남 정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대남 전략(정책)은 그들의 대내외 상황에 따라 ‘무력 전쟁’과 ‘남조선 혁명’ 그리고 남한체제 약화를 겨냥한 ‘남북 대화’ 및 북한체제의 유지 안정을 위한 ‘위장 평화’ 등의 방식을 배합 사용해왔다.

지금 북한은 국가 유지의 兩軸인 체제 유지(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유지 발전에서 안보와 경제, 양자의 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면서도 대립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나, 체제 유지에는 결정적으로 위해로운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이 극도로 어려운 식량 사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 협력(외국 자본의 유치)의 길뿐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에 절대적인 기대를 걸고 있으며,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대미 관계 개선도 이러한 투자 환경 조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도 시급한 문제이나 근본적인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이 전면에서 체제와 정권의 보위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긴장의 조성이 요구되며, 북한은 지금 그 긴장의 요인을 남한으로부터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남한을 主敵 개념으로 인식하고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대남 정책은 체제 유지와 공산화 통일을 기본 목표로, 대내외 상황에 따라 위장 평화 공세와 대결 전복 전략을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 추진해왔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정책일진데 우리의 대응 태도에 따라 대남 자세를 바꾸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나가는 가운데, 점차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멀고도 가까운 길일 것이다. 続